

악성 민원에...20년 소아과병원 문 닫는다

비급여 2천원 문제 삼아 온라인 악평까지...폐원 공지 소아과 감소율 전국 1위 광주 "지원자 더 줄까" 걱정

광주에서 20여년째 소아과 진료를 하고 있는 전문의가 환자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문을 닫겠다고 공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안그래도 광주·전남지역에 소아과 의원이 부족한 마당에 소아과 의원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까지 알려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소아과마저 사라질 위기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소아과의원 A 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우리 의원은 한 환자 보호자의 악성 허위민원으로 인해 2023년 8월 5일부로 폐과함을 알립니다'라는 공지문(사진)을 게시했다.

A 원장은 공지문을 통해 '타 병원 치료에 나지 않고 피부가 붓고, 고름 진물이 나와서 엄마 손에 끌려왔던 4살 아이. 2번째 방문에서는 보호자가 많이 좋아졌다 할 정도로 나아졌다'면서 '하지만 보호자는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 운운하며 허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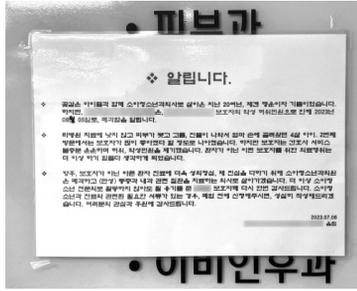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아닌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생각하게 됐다'며 '향후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폐과하고 만성 통증과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고 적었다.

A 원장과 통화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따르면, 아이 보호자 B씨는 최근 이원에서 진료받은 이후 드레싱용 거즈 등 비급여 항목으로 2000원가량 청구된 것을 '부당한 청구'라고 지적했다. 비급여항목 추가비용 청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B씨는 A 의원으로부터 2000원을 환불받았으나, 이후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비급여항목 부당 청구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광주지원은 최근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바탕으로 부당 청구 사실을 인정하고 진료비 등을 환불할 것을 A 원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퍼지며 관심을 모았다. 네이버 리뷰 댓글, 맘카페 등지에서는



"애초부터 호불호가 갈리는 원장이었다", "원장이 자기 기본 좋을때만 친절하게 진료한다", "종이에 주의사항 몇 줄 적어두고 비급여로 청구했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반면 "누구보다 정직으로 꼼꼼하게 봐주신다", "누구보다 아이에게 진심인 명의이다"는 등 응원 댓글도 쏟아졌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광주·전남 소아과 전공의 및 병원이 더욱 움츠러들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전부터 낮은 의료수가와 고령화 등 이유로 광주지역 소아과 감소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

고 있는데, 환자 보호자의 민원과 이용후기(리뷰)에도 시달려야 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더해져 소아과 전문의 감소 추세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다.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과목별 의원 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광주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42곳, 전남은 26곳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는 10년 전인 2013년 말 기준으로 58곳이었으나 올해 42곳으로 27.6% 줄어들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전남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10년 전 31곳에서 올해 26곳으로 줄어 감소율 16.1%를 기록, 전국 3위에 올랐다.

임 회장은 "의료수가부터 타과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마당에 환자 보호자로부터 각종 소송과 민원에 시달리기 일췌하니 누가 소아과를 하겠느냐"며 "광주·전남 또한 전남대, 조선대 소아과 전공의 지원자가 해마다 미달하는 상황인데, 지원자가 더욱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과 의사가 민원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화제의 판결

자녀 면접권 남용한 친모 약취유인 인정

광주지법 집행유예 2년 선고

이혼한 엄마가 어린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남용했다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면접교섭 종료시간 오후 6시가 지났는데도 자신의 딸인 B(5)양을 친부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혼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을 상실했고 광주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면접 종료시간 25분 전 친부에게 일방적으로 'B(물)고기 보고 싶다 해서 여수 왔다. 내일 간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친부가 다음 날이라도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

절했다.

친부는 다음날 A씨 집에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이 출동했고 B양이 '이런 주까지 엄마와 있겠다'고 말해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A씨가 한 주가 지나도 B양을 인도하지 않자 A씨를 고소하는데 이어 지난 1월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제기해 3월에야 B양을 만날 수 있었다. A씨는 어린 딸이 자신과 있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5개월만에야 친부에게 되돌려 준 셈이다.

A씨는 B양의 의사를 존중했고, 친부와 연락수단을 없애거나 불가능하게 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친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면접교섭기간 종료 후 친부에게 데려다 주지 않은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B양과 통화하고 싶다는 친부의 요구에 '아빠랑 통화하기 싫다'라며 일방적으로 의사만 전달한 점, B양은 유아로 사리별별 능력이 완속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B양을 친부로부터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지난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생후 6일 딸 방치 숨지자 유기한 친모 구속

유기 영아 조사하자 5년만에 자수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범행 5년만에 자수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영아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A(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초 광주에서 생후 6일 된 아기를 방치한 상태로 외출했다가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써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미혼모로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3시간 여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걸싸게에 싸인 아이가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아기 시신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령 영아'에 대한 지자체의 전수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5년 전 범행이 들릴 것을 우려해 지난 6일 광주광산경찰서에 직접 자수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파트 수신택 사들여

강통전세 양산

순천 부부 사기범 구속기소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아파트 수신택을 사들여 전세를 놓는 일명 '무자본 깡투자'로 68억원 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부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전세사기를 벌인 A(56)씨와 B(여·49)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파트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강통전세'를 양산해, 피해자 45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약 6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순천 뿐 아니라 전주, 대전 등 전국에 퍼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빚이 많은데다 세금까지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주며 단기간 자금을 빌려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아파트를 2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상대로 매매가보다 비싼 보증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계약기간이 도래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돌려막기하다 결국 계약 만료에도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상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해 아파트 경매로 우선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이상철 곡성군수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이 군수는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소 관련자와 식사비용을 대납해 준 7명엔겐 50~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또 선거운동원 14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식사모임은 선거운동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 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정한 선거를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